광주·전남 지자체 올 3조5000억 공공 발주

공사·용역·물품 계약 대부분 상반기 집중 집행 지역업체 참여 적극 유도

올해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해 기초 지방단체들이 발주하는 1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규모는 모두 3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발주하는 1000만원 이상 사업은 1067건으로 금액으로는 9032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공사는 449건(2979억원)이며, 물품 373건(3000억원), 용역 245건(3153건) 등이다.

광주시 5개 자치구의 발주 액수까지 합하면 1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발주 사업 대부분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이다.

올해 전남도와 시·군이 올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규모는 2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1000만원 이상 사업은 1만3천477건으로 금액으로는 2조6411억원이다.

도 본청에서는 공사 425건(4448억원), 용역 190건(416억원), 물품 209건(357억원) 등 모두 824건(5261억원), 22개 시·군은 공사 8821건(1조7424억원), 용역 2035건(2315억원), 물품 1797건(1410억원) 등 1만2653건(2조1150억원)이다.

전남도는 도 본청의 발주 금액 중 88.6%인 4660억원(773건)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이다.

각 시·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할 방침이다. 지역제한, 지역 의무 공동도급 등 지역 업체 보호제도도 우선으로 적용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는 도내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이상 공사는 도내업체가 최소 49% 이상 참여하는 등 방식이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전국적으로 30조 4000억원 상당의 공공부문 시설공사를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발주할 시설공사 규모는 지난해의 29조8000억원보다 2.1%(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7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내 한전KPS 5층 창조홀에서 열린 '제4차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에 참석한 기관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영·호남 8개 시·도 공동발전 협력 강화

내일 여수서 시도지사협의회 광역철도망·에너지 신사업 등 정책 8건·과제 2건 공동 건의

영·호남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광주~대구 내륙철도,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영·호남을 잇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정부에 공동건의할 예정이다. 소원했던 양 지역의 교류를 촉발함으로써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이 외에도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의 공동정책 과제도 협의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전남, 전북,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지사는 9일 여수시 엠블호텔에서 제13회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를 연다.

이 협의회는 영호남 광역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경제교류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의제는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목포~부산 남해안철도 고속전철화, 목포~새만금 서해철도 건설,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 등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등이다.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여수~남해 동서해저터널 건설 등 광역도로망 건설사업 등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에너지 신산업이 국가발전과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원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한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구축, 환경오염물질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권 지자체 위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 국가부담 확대 등을 논의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광주시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등을 홍보하고 영·호남 지자체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1998년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와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최권일·윤현석기자 cki@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 양 지역 추진협의회 구성"

유정심 광주시의원 촉구

유정심(국민의당·남구 2) 광주시의원은 7일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 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양 지역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는 현재까지 전무하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3년 3월 대구시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계획을 대선공약으로 요구하기도 했고, 광주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광주·대구 달빛동맹 교류협력은 이제 선언적 달빛동맹의 한계를 넘어 동서간 지역민의 교류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 과제 발굴로 대형 국책사업을 함께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동서 내륙철도 건설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대구시, 양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회가 함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동서 내륙철도 건설을 반드시 추진하자"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3곳 4·12 보궐선거 치른다

광역 1곳·기초의원 2곳

전남에서 광역의원 1곳과 기초의원 2곳 등 3곳에서 4·12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7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보궐선거에선 해남군 제2선거구 도의원 1명과 여수 나·순천 나선거구 시의원 2명 등 3명을 각각 뽑는다.

해남은 김효남 도의원이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사직했으며, 여수는 노순기 시의원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기간을 놓쳐 형이 확정되는 바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순천에서는 박광득 시의원이 임기 중 숨졌다.

최근 보궐선거가 확정된 해남의 경우 아직까지 예비후보등록자는 없지만 해남군의원 2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여수와 순천시의원 보궐선거는 예비후보들이 일찌감치 후보등록을 마치면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7일 현재 여수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박장실 연합상사 대표와 최처중 무덕체육관장, 김승호 운정기업 대표, 이정만 법무사, 최창남 전 새마을지도자 여수시 협의회장, 박남조 월호동사무소 자치위원 등 6명다.

순천에서는 강형구 전 시의원, 김용찬 별량가스 대표, 이명옥 전 순천시 복지위원, 김호준 전 낙안원예협회장, 최진도 첨산복지센터 대표 등 5명이 등록했다.

광주에서는 재보선이 치러지는 선거구가 없다. 구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사직한 광산구의회에 결원이 발생했지만, 선관위는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이종행기자golee@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

3대 공동회장 이낙연 지사·여인홍 사장 선임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제3대 공동회장으로 이낙연 전남지사와 여인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을 선임했다.

협의회는 이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전 KPS(주)에서 회의를 열고 제3대 공동협의회장 선임과 함께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새롭게 포함시켰다.

제3대 공동협의회장은 자체 규약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광주시, 전남도)와 이전 공공기관에서 1명씩 선임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제2대 공동회장인 윤장현 광주시장, 정의헌 한전KPS 사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등 기관장 22명이 참석했다.

혁신도시 조성 현황과 정주여건 개선사항, 지난해 실무위원회 운영 등 주요 성과, 기관별 지역협력 공헌사업 등을 보고 받고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2017년 공동과제인 초·중·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과 이전기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빛가람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 계획에 대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빛가람혁신도시에는 2013년부터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4개 기관이 정착했다.

올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옮겨오면 16개 모든 기관이 이전한다.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16개 공공기관과 광주시·전남도·나주시·광주전남 시도교육청·나주경찰서 등 22개 기관이 혁신도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4년 12월 출범했으며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지역발전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부 "中 사드 보복 WTO 위반 검토 중"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문화·경제 분야 '보복성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7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향후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중앙)정부, 민간, 지방정부의 조치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WTO 위반 여부를) 실무적으로 들여다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다만 "어떤 조치가 WTO 제소 대상이 되려면 '정부가 취한 명시적 조치'라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부당해 보이는데 그게 WTO 어떤 조항 위반이지 딱 짚어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하고 영업 활동 하는 것이 전보다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사드 관련성 여부를 떠나 중국의 어떤 조치가 우리 기업의 영업 활동에 불편을 준다고 판단되면 경제부처와 협력해서 필요한 조치는 그때그때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